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973
------	------

제출년월일 : 2017. 11. 1.
제출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총 무 과)

1.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력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평등이념 구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 나.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및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교육감 책무사항 규정 (안 제3조)
-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라. 편의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마. 전문기관에 지원한 경비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3. 조례안: 불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5. 참고 사항

- 가. 입법예고: 2017. 9. 29. ~ 10. 13.(15일간, 의견 없음)
- 나. 관계법령: 불임
- 다. 타시도 현황: 불임
-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사항: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 등”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이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단,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함)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 기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에서 지정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 업무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 조례 시행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는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비용추계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 소요예산: (3명* × 15,000천원) + (2명** × 10,000천원) = 65,000천원
 - * 3명(중증 장애인공무원: 뇌병변 장애2급 및 3급, 지체장애 1급),
 - ** 2명(경증 장애인공무원: 시각장애 5급 1호, 지체장애 3급)
 - ※ 보조공학기기는 소리증폭장치, 확대독서기, 높낮이조절테이블 등 200여 개 기기
 - 근로지원인 지원
 - 2017년 지방공무원 임용 교육행정(장애인) 최종 합격자(시각장애 1급)
 - 2018년 임용유예로 인해 2019년 본예산 시 편성
 - 조례 시행 후 시급한 지원 대상자 외 기존 장애인공무원, 신규임용 및 전입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하여 편의지원 소요예산은 신청 및 조사·선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매년 변동이 있음
- [참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관련 수요조사(총무과-14822, 2017.10.18.) 실시 결과
- ☞ 중증장애인 1명 및 경증장애인 2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희망

연번	장애유형	등급구분	지원내용	금액(천원)
1	뇌병변 3급	중증	대형모니터	310
2	시각장애 5급 1호	경증	대형모니터	310
3	지체장애 6급	경증	등받이 쿠션	430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교육청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근로 지원을 위해 보조공학기기·장비 및 근로지원인 지원 수요예측 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한성식(053-231-0561)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단서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단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타 시· 시도 조례 제정현황

〈 기준 : '17. 10. 1. 〉

구분	시도	지원범위	제정일자
교육청 (9곳)	부산	지방공무원	'16.09.28.
	대전	지방공무원, 교원(별도조례)	'17.02.10.
	울산	지방공무원	'16.09.29.
	세종	지방공무원	'16.12.20.
	경기	지방공무원	'17.06.14.
	충북	지방공무원	'17.09.29.
	충남	지방공무원	'16.12.30.
	전북	지방공무원	'16.05.13.
	제주	지방공무원	'17.08.16.
자치단체 (2곳)	대구시	지방공무원	'16.09.20.
	서구	지방공무원	'17.03.02.